

남북한 표준어 정책 전환의 필요성* **

- 포스트휴머니즘 시대 표준어가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이 찬 규***

Ⅰ 국문초록 Ⅰ

본 연구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성문화된 규정으로 제시한 북한의 문화어와 남한의 표준어에 있다고 보며,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표준어가 오히려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표준어 개념은 15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프랑스는 영국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는 다시 독일에 영향을 미쳤다.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럽에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정부의 영향력을 높일 의도로 계획한 표준어 정책은 독일을 통해 제국주의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일제 강점기의 한국에까지 이어져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표준어 정책을 제정한 국가가 된 것이다.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맞춤법 규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어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은 것은 북한이 문화어 정책을 통해 말다듬기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남한도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어휘의 표준을 정해 온 결과로 보인다. 남북이 각각의 성문화된 표준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평화 조성에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소통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까지는 언어의 표준화가 소통에 도움이 되었지만 향후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언어 다양성 보장, 언어의 창조적 기능 활성화, 언어 평등권 확보'라는 개념이 강화될 것이므로 표준어가 오히려 소통의 풍부함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을 폐지하면 인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기준으로 삼으며, 사전 등에 수록된 언어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합리적 방법일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표준어라는 '선택적' 개념 대신에 한민족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한민족공동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이 공동어라는 개념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한민족공동어(韓共同語) 정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와 활동을 전개한 후 표준어와 문화어를 폐지하여, 가능한 다양한 한국어 방언들이 언중들 사이에서 유통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표준어, 문화어, 표준어규정, 표준어 정책, 공동어, 언어이질화, 언어 통합

* 이 논문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개최한 개교 70주년 기념 제47회 동양학 국제학술대회(통일한국을 위한 인문학적 모색)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8538).

*** 중앙대학교 교수 / leeck@cau.ac.kr

I 목 차 I

I. 서 론	IV. 포스트휴먼시즘 시대, 표준어가 언중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
II. 한국에서 표준어 개념의 형성 과정	V. 표준어 정책의 폐지와 남북한 언어 통합의 단계별 절차
III. 표준어와 문화어가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미친 영향	VI. 결 론

I.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전개될 포스트휴먼 시대와 전향적인 남북 개방 교류를 염두에 두고, 이후에 표준어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보고, 향후 표준어 정책 방향 제안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질화의 여러 영역 중 특히 어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문금현, 2004). 인류 언어사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 이질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적 고립이다. 남한과 북한도 향후 언어적으로 계속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이질화의 정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남북이 통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별다른 접촉도 없이 100년 이상 흐른다면 향후에는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를지도 모른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남북이 상호 적극 교류한다는 가정 하에 그에 대비하여 표준어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남북한 각각 어문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규정은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정도로 국가 주도로 제정되었다. 향후 흡수 통일이 아닌 합의 통일 방식을 택한다면 어떤 한쪽의 어문 규정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강한 어문 규정이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한 쪽의 규정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많은 갈등을 낳아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이전이라도 적극적인 교류 시기에 언어 이질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언어 통합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지를 부단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표준어라는 개념이 현대나 미래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과연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한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언어를 발전 유지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화된 표준어 정책이 방언 사용자들을 위계화하고, 언어적 다양성을 해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물론 표준어는, 생성 동기나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과 문화 생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 와서 표준어는 오히려 언어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에서 표준화는 두 가지 대상에 적용된다. 하나는 정서법과 표기법이나 발음법 등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1)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표준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도 표준어 구사자와 사투리 사용자들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조태린, 2004: 82 참조). 따라서 서울말과 평양말 중 하나를 표준어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 하는 측면과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 또는 공용어의 지위와 같은 언어의 공적 위상과 관련된 표준화이다.²⁾ 본고에서는 후자인 언어위상계획으로서의 표준화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철자법의 경우 표기에 관한 문제이므로 언어적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방언의 추상적 형태인 ‘표준어’를 국가에서 성문화된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³⁾

성문화된 표준어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⁴⁾ 아직까지도 그 타당성이 공론화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남북 관계의 경직성에 기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 들어 남북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본격적으로 표준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조만간 도래할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문화 전반에 규범성보다는 개별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도 표준어의 효용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형성된 과정과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배경, 외국의 사례, 남북관계의 변화, 언어 다양성 보장, 언어 창조성 확대, 언어 평등권 보장 등을 근거로 성문화된 표준어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에서 표준어 개념의 형성 과정

한국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표준어 개념⁵⁾이 도입된 것은 20세기 초인 대한제국에 이르러서이다. 표준어 개념은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발현되었으며, 어떻게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세계적으로 표준어가 도입된 것은 영어의 정착 과정과 관련이 있다. 영국은 앵글스, 색슨, 주트 세 부족이 모여 성립된 국가이었기 때문에 중세 때까지도 5대 방언권이 존재해 있었다. 12세기 중세 시기에 상류층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해 온 전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각각의 방언에서 저술된 작품들을 상호 이

2) 표기법 등과 관련된 것을 ‘언어자료계획(corpus planning)’이라 하고, 언어의 공적 위상에 관련된 것을 ‘언어위상계획(status planning)’이라 한다.

3) 본고에서 논의하는 용어인 ‘표준어’는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표준어를 지칭한다. 그 이외에는 표준말이나 표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 표준어규정이 제정된 1988년 당시부터 2004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새국어생활(2004년 봄호)에서 특징으로 다룬 ‘표준어 정책과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 조태린(2016)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5) 세종대왕이 편찬한 ‘훈민정음’이나 ‘동국정운(東國正韻)’ 등도 넓게 보면 국어의 표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번 논고에서는 근대 이후에 전개된 언어 표준화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까지 영어 방언들은 서로 소통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 이르러 왕권이 강화되어 The King's English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런던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작가들도 런던의 영어로 작품을 쓰고, 런던 근교의 두 대학(Oxford와 Cambridge)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런던의 영어가 표준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물론 런던 영어도 여러 방언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영국 영어의 표준말은 런던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성보다는 BBC방송의 언어라든지, RP(Received Pronunciation, Contemporary RP)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쪽의 스코트랜드와 남부 잉글랜드 사이에는 상당한 방언 차이가 존재한다.

2.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영어의 표준어 개념은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1539년 프랑수아 1세는 빌레르 코트레 칙령을 공포하여 모든 사법, 행정 절차를 오직 모국어인 프랑스어로만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어 정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43년 5월 14일 루이14세가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프랑스는 여러 개의 소왕국이 존재하고 언어는 흩어져 있었다. 루이14세가, 루이13세 때인 1635년에 설립된 아카데미 프랑세스를 통해 프랑스어 통일에 나서게 되면서⁶⁾ 근대적인 프랑스어가 성립되었다. 루이14세는 대대적인 프랑스어 통일 작업에 나섰으며 궁정 프랑스어가 언어가 진정한 프랑스어라는 인식을 심어 방언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귀족들에게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아한 교양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0%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자코뱅파의 일원인 앙리 그레고와르는 “2500만명의 프랑스인 중,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프랑스인은 300만명밖에 없다”고 했을 정도로 이 시기의 프랑스의 지방에서는 지방 언어의 사용이 많았다.⁷⁾ 이후 혁명정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프랑스어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어가 일찍이 표준화된 배경에는 유럽에서 프랑스어가 외교적 언어로 활발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 프랑스는 언어와 관련한 중요한 입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975년 12월 31일의 바로리올법이다(1977, 1982에 개정). 이 법은 모든 상업 분야와 과학과 기술, 교육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김현권, 2003). 이미 국가적으로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1975년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어 사용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 상류층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교적 언어인 프랑스어와 프랑스 지역어 사이에 오랜 동안 괴리가 존재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도 특별한 지역어나 계층의 언어를 표준으로 정하지 않고, 아카데미 프랑세스에서 편찬하는 사전을 프랑스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6) 루이14세는 아카데미 프랑세스만이 프랑스어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 기관 외에는 사전 편찬을 금지하여, 1694년에 프랑스어 ‘아카데미 사전’이 편찬되었다.

7) 그레고와르는 ‘지역어를 추방하고 프랑스어 사용을 보편화해야 할 필요성과 방도(1794년)’라는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3. 독일

15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표준어 개념은 16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독일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준 독일어는 1800년 이전까지 거의 문어로만 존재했다. 독일어권에는 많은 구어 방언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방언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최대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면서 만들어진 언어가 표준 독일어였다. 표준 독일어의 뿌리는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인데, 이 성격이 북부독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표준 독일어가 Hochdeutsch가 된 것이다. 19세기 들어서 표준 독일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점점 구어로 사용하는 시도들이 나타났고 결국 1870년 통일 독일 제국이 성립되면서 방언들을 밀어내고 일상 언어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략적인 표준 발음법이 확립되었고, 학교 등을 통해 독일어권의 언중들이 쓰는 언어로 전파된 것이다. 여기에는 괴테로 대표되는 바이마르 고전주의자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이들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일어난 낭만주의와 프랑스 계몽주의를 수용하여 많은 문학 작품들을 내 놓았는데, 이것이 문어체 독일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독일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기간의 식민지 정책과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점령국이나 주변국들에게 독일어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공식적으로 표준 독일어(Standarddeutsch)라고 부르는 Hochdeutsch(고지 독일어(高地 獨逸語))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지방이 아닌 동중부 튀링겐 방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 표준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통용되지만 스위스에서는 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독일어의 방언은 억양이나 발음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현대에서도 지역마다 단어 자체가 달라 다른 지방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표준 독일어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다. 현재 세계 8개국에서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는 방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달리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표준어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표준어를 조정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독일에는 문교부장관위원회가 있지만 1996년 독일어 정서법개혁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기관은 일반 대중과 비정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현대에 와서 표준 독일어는 주로 주요 출판사에서 발행한 사전⁸⁾이 기준이 되고 있다.

4. 일본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이루면서 통일 국가가 된 일본은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주창하였다. 1871년 11월 12일 명치유신의 주역들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유럽과 미국 시찰에 나서는데, 유럽에 간 시찰단은 당시 철권통치를 시행하였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독일을 전범(典範)으로 삼아 모든 국가 형태를 수렴해 나갔다. 근대화와 공업화의 기치를 내걸고 독일의 모든 문물을 수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독일에서 형성되었던 표준 독일어에 대해서 인식했을 것으로 본다. 1890년 “일본어학일반(日本語學一斑)”에서 standard language의 역어로서 표준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

8) 독일 뉘른 출판사에서 간행된 정서법 사전이 독일어 정서법에 있어 권위 있는 서적 중 하나이다.

郎)이며, 그로부터 5년 후인 1895년,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가 ‘표준어에 관하여(標準語に就きて)’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유럽 선진국들에서 표준어가 국가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판이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표준어라는 개념을 각인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임영철, 2011).

이후 메이지 중기부터 쇼와 전기까지 주로 도쿄 야마노테의 교양 계층이 사용하는 말을 기반으로 표준어를 정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편찬하는 등의 시도가 진행되었고, 문단에서도 언문일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표준어 정책과 표준어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 방언에 대한 유형, 무형의 탄압도 심하게 이루어졌다.⁹⁾ 그러나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표준어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었으며, 이후 국가가 특정 방언을 표준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이렇다 1949년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가 후쿠시마현 시라카와시를 조사하고, 동북 사투리와 표준어의 중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이러한 말이 전국 공통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전국 공통어’ 줄여서 ‘공통어’라고 명명하면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표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통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몇 국가의 표준어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몇 국가의 언어 정책

국가	주요 언어 정책	언어 정책 담당 기관	주요 사항
미국	공식적인 표준어가 없고, 학교 영어 등에서 표준화 담당		권위 있는 사전 등이 표준 영어의 공신력을 인정 받음. 이민자의 언어를 인정하는 이중언어 정책
스페인	스페인의 스페인어 표준화와 사전 편찬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스페인 왕립 학술원 (Real Academia Española)	스페인어 아카데미 협회(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ASALE): 1951년에 결성된 스페인어의 세계 표준 규범을 제정하는 기구.	스페인어 아카데미 협회는 스페인 왕립 학술원을 포함해 전 세계 22개 스페인어 사용 국가의 표준어 제정 기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중국	‘한자의 간략화(簡化), 보통화의 보급, 한어병음방안 (漢語拼音方案)의 제정 보급’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 (國家語文字工作委員會)	중국 정부는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인 보통화와 규범 한자의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단, 각 민족은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발달시킬 자유를 가지되, 언어 문자 사용은 헌법, 민족 자치법에 따르고 있음.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어 표준화에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¹⁰⁾과 상황,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성을 지닌 언어를 표준화하는 일은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소통과 언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반면에 차별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언중들의 자유로운 언어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9) 이자와 슈지(伊沢修二)는 교원을 위한 책을 만들어 도호쿠(東北) 방언 교정법을 설명하는가 하면 심지어 지방 학교에서는 방언을 말한 사람 목에 ‘방언 꼬리표’를 걸게 하는 등의 벌칙까지 있었다고 한다(양민호, 2017).

10) 프랑스 혁명 시기에 혁명정부는 자유를 주창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위해 지방의 소수 언어를 탄압하고 언어의 자유에 관련된 법도 철회하는 모순을 보인다. 당시 자코뱅파의 일원인 앙리 그레고와르는 “2500만명의 프랑스인 중,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프랑스인은 300만명밖에 없다”고 한탄했을 정도로 이 시기의 프랑스의 지방에서는 지방 언어의 사용이 많았다.

5. 한국의 표준어 개념 형성

언어는 의사소통 이상의 기능을 갖는다. 한국 민족은 한국어를,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순수성을 지켜가려는 집단 의식도 강한 편이다.¹¹⁾ 그 결과로 국어 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도 높다.¹²⁾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한국에서는 언어 표준화에 관한 세계적으로 가장 확고한 법적 근거인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표준어 정책과 관련한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현대의 한국어 관련 주요 정책 변화

- (1) 대한제국 정부는 1905년 7월에 지석영이 올린 상소인 ‘신정국문(新訂國文)’을 총 6항목으로 된 맞춤법 통일안으로서 공포함.¹³⁾
- (2) 국문연구의정안(1909)¹⁴⁾ : 대한제국의 ‘국문연구소’에서 제정
- (3)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¹⁵⁾ : 조선총독부 제정
- (4)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1921) : 조선총독부 개정
- (5) 언문철자법(1930)¹⁶⁾ : 조선총독부 개정
- (6) 한글맞춤법통일안(1933)¹⁷⁾ : 조선어학회 제정
- (7)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10) : 조선어학회 편찬
- (8)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외래어 표기법 제정(1948.10.09) : 대한민국 정부
- (9) 대통령령에 의해 국어순화운동협의회 결성(1976) : 대통령령
- (10)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1988) : 문교부 제정
- (11) 공문서 한자 병기를 위한 사무관리규정 개정(1999.8.7)
- (12) 국어기본법(2013)¹⁸⁾ :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 11) 김성환 부산대 교수의 기고글, ‘경향신문(2017.9.17)의 [금지를 금지하라(17)뿌리 깊은 ‘순수성 집착’…순수하지 않은 것은 정녕 나쁜가] 참조.
- 12) 김선철(2009: 6)에서는 국어 순화의 내용을 ‘외래 요소 제거’, ‘쉬운 말 쓰기’, ‘전통 표현 쓰기’, ‘비속어 제거’, ‘표준어 쓰기’, ‘고운 말 쓰기’, ‘청각 인상적 순화’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어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 13) 이것에 대해 당시의 학자들은 합리성이 결여된 개인의 상소를 맞춤법으로 공포한 것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 14) 국문연구소가 국어 맞춤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에 관해 연구하여 제출한 보고서로서 철자법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다.
- 15)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제정된 철자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에서 결성한 국문연구소를 이어 받아 수행한 작업의 결과이다. 유길준과 일본인 학자 다카하시(高橋亨) 등이 참여하였다. 총독부에서 이 철자법을 제정한 이유는 일본어 교재에 한글 음절표를 사용하여 일본어를 쉽게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주필, 2014 참조). 여기에서 처음으로 서울 방언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 16) 최현배(崔鉉培), 오구라(小倉進平) 등이 참여하였다.
- 17) 조선어학회에서 발표문에 밝혔듯이 통일안 발표까지 3년이 걸렸으며, 125회의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통일안 제정에 상당한 격론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지방 방언을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이후 한국어 표준어에 인공성이 더해지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 이 통일안이 현대 남북한 국어맞춤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 18) 국어기본법(법률 제11690호 공포일 2013.03.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라고 명확히 규정함
제10조 공공기관에 국어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한국에서 표준어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일본의 강제 합병 이후의 일이다. 강제 합병 이전에는 철자법 통일안에 대한 개념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혼민정을 창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맞춤법 통일안을 공포한 것은 대한제국 정부가 1905년 7월에 지석영이 올린 상소인 ‘신정국문(新訂國文)’을 총 6항목으로 된 맞춤법 통일안으로서 공포한 것이 최초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을 관보에 실은 것을 두고 여러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에서는 1907년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일본은 이보다 앞서 1900년에 국어(일본어)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문연구소 위원 중에 일본 학부의 사무관이 파견되어 온 것을 보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최경봉, 시정곤, 박영준(2008)). 그러나 국문연구소가 사전 편찬에 대한 언급이 없자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문연구에 대한 관견’이라는 논설을 통해, 표준어에 대한 개념 도입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실게 된다.

다만, 그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해 온전한 경성(서울)의 토속어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등 부류를 구별하여 국어사전 일부를 편성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게 하라. <1908년 3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 논설 ‘국문연구에 대한 관견’>

이미 일본에서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1890년에 표준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본다. 국문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1909년 ‘국문연구의정안’을 통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주로 표기법에 관한 것이고 표준어에 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뒤인 1912년 일본이 한국민들에게 일본어를 쉽게 익힐 목적으로 편찬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방언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언급이 나와 있다. 일제 치하의 조선총독부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한국어 표준어에 대한 공식적인 정립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 책은 그 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한국어의 표기법을 최초로 성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후 편찬되는 표기법과 표준어에 대한 논의는 이 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현대 남북한 표기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표준어를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표준어의 기틀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통일안에서 표준어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조선어학회에서는 표준어 사정 위원을 선정¹⁹⁾하고, 표준어 구축 작업에 돌입하여 1936년 10월 28일(당시 한글날) 9,457개의 사정한 표준어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1988년 국가적 차원에서 ‘한글맞춤법 및 표준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과 실적 평가, 국어 환경 개선 시책 추진, 국어 능력 향상 프로 그램 개발 시행 등 국어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19) 표준어 사정위원회는 73명이었는데, 서울·경기권 출신이 37명이고, 나머지는 인구 비례별로 각 시도 대표들을 선발하였다. 표준어 사정에서 단어의 선정은 투표로 결정되었는데, 투표권은 서울·경기권 위원 37명에게만 주어졌다. 나머지 지역 출신 위원들은 이의 제기만 할 수 있었으며, 이의 제기된 단어들에 대해서는 재심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방의 방언을 수용하되, 결정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어 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어 2013년에는 '국어기본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철자법뿐만 아니라 표준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착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표준어라는 개념은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된 것으로 보아 일본의 영향을 받아 명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정착 유럽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형성된 '표준어'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언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하여 이미 1945년 이후부터는 비판을 받아 오다가 1949년에 이르러 이를 공통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 데 반하여 우리 국어학계에서는 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 의문이다. 특히나 한국어의 경우는 일본어보다는 방언적 차이가 크지 않아 소통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강화시켜 온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1988년 표준어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간헐적으로 '표준어 제정' 자체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²⁰⁾

Ⅲ. 표준어와 문화어가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미친 영향

근대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표준어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는 중앙집권 강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19세기 초반까지도 중앙집권이 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어들이 강해 한 국가 내에서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유럽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정신으로 이어 졌으며, 일제 강점기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과 북이 각각 언어적 주권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표준어와 문화어로 귀착된 결과를 가져 왔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한이 계속적으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북한을 의식하여 남한 표준어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경우도 남한 표준어를 의식하여 대립적인 개념으로 '문화어'라는 개념을 만들고, 같은 이유로 이를 강화해 오다 보니 서울 표준어와 평양 표준어라고 하는 대립적인 구도가 강하게 형성된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가 언어의 표준화를 가속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에 이어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발표된 이후 1942년부터 일제의 거세진 탄압으로 조선어학회 회원 31명이 검거되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국어 표준화 운동은 이렇다 할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후 남북한이 분단되고 서로 다른 표준어 정책을 펼치면서 이질화가 심해진 것이다.

남한에서는 분단 이전인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한국어 표준의 지역적 기반을 '서울'로 정하였기 때문에 표준어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약했던 반면, 북한에서는 언어적 주권 확립을 위해 새로운 표준어의 정립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1966년에 이미 표준어에 상대되는 평양어 중심의 문화어 개념

20) 대표적으로는 김세중(2004), 민현식(2004), 이상규·조태린 외(2008), 최경봉(2011), 한용운(2007), 조태린(2004), 최경봉(2006) 등.

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남한에서는 형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글마춤법통일안’을 보완하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구시대적 계층성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1988년에 국가적인 차원의 표준어 규정을 정하게 된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정한 ‘표준어’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공론화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에 ‘문화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각각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어

우리나라에서 고시된 표준어 규정(1988) 총칙 제1항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계층성, 시대성, 지역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계층성 - 교양 있는 사람
- 시대성 - 현대
- 지역성 - 서울

이는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이어 가고 있다. 1933년과 규정과 1988년 규정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준어에 대한 규정 비교

	1933년 규정	1988년 규정	변화 근거
용어	표준말	표준어	표준어 - 비표준어라는 용어의 대비 차원
계층성	중류사회	교양 있는 사람	중류사회라는 용어의 퇴조와 교육적 관점 반영 ²¹⁾
시대성	현재	현대	역사의 흐름에서 구획을 인식

많은 국어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계층에 관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민현식(2004: 124)에서는 교양이라는 개념이 ‘정의 내리기 어려운 비언어학적 용어’라는 점을 지적하고, 차라리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본 도구라는 점에서 볼 때, ‘의사소통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두루 쓰는’과 같이 계층성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어를 정할 때, 지역성을 고려하지만 계층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예는 많지 않다.²²⁾ 이처럼 표준어 규정에 계층성을 명확히 하다 보니

21) 이웅백(1989: 191) 참조.

22) 영국에서도 ‘여왕의 영어(the Queen’s English)’라 하여 왕족의 언어를 표준어로 삼고, 그 중 표준 발음만을 떼어서 ‘RP (Received Pronunciation)’라는 용인된 발음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이 RP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교양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가질 수 있다.²³⁾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자면, 지방에서 태어나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성장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사투리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비교양인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1988년의 표준어규정이 국가에서 제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정작 일본에서는 1949년에 표준어라는 용어를 버리고 ‘공통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차별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어에 지역적 우월성을 부과하는 것도 차별의 요인이 되거니와 여기에 계층성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언어적 규범이 특정 지역의 특권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소지가 다분하다.²⁴⁾ 표준어의 필요성이 ‘공공 소통성’을 위한 것이라면 차별성을 전제한 ‘지역성, 계층성’에 대한 명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²⁵⁾

‘자장면 - 짜장면’ 논쟁은 표준어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88년 당시 ‘자장면’이 표준어가 되면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짜장면’은 비표준어가 되었고, 방송국의 아나운서들도 하루아침에 ‘짜장면’을 버리고 어색하게도 ‘자장면’으로 발음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2011년 8월이 돼서야 다시 ‘짜장면’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으니²⁶⁾ 그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짜장면’이라고 말한다고 비판받아온 많은 언중들은 허탈감과 느낄 수밖에 없었다.²⁷⁾

2. 문화어

북한은 1949년부터 한글 전용을 실시하고, 맞춤법, 표준어의 보급과 함께 대대적인 말 다듬기 운동을 시작하여 1966년에는 김일성 교시에 의해 ‘문화어’를 제정하였다. 조선말대사전(1992)에, ‘문화어’를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선말규범집(1998) 중 문화어발음법 총칙에는 “조선말 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3) ‘교양인은 표준어를 사용한다’라는 명제에서 ‘교양인이 아니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양인’이 못 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정서상 교양이 없는 비주류로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다.
- 24) 2006년 지역말 연구모임인 ‘땃말두레’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해 지역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교양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표준어 규정과 국어기본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 5월 28일 현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 25) 다른 관점이기도 하지만 김세중(2004: 119)에서는 표준어 규정은 사전 표제어 결정을 위해 필요했고 사전 편찬에 사용됨으로써 그 역할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 26)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은 그 동안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던 ‘간지럽히다, 오순도순, 짜장면’ 등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27) 문교부가 1988년 ‘표준어 규정’을 고시한 이래, 1990년 국어연구소에서 표준어모음을 발간하고, 1999년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 발간하면서 표준어 규정이 현실과 괴리된 교조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계층성 - 노동 계급
- 시대성 - 현대어로 추정됨
- 지역성 - 평양말²⁸⁾

북한의 문화어는 우리나라의 표준어 규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주도로 인위적인 어휘 가공 작업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북한의 문화어는 단순히 언어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언어 개조의 성격이 강하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자어와 외래어를 무리하리만큼 고유어로 전환하며, 순화어휘가 발표됨과 동시에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북한의 문화어는 남한의 표준어와는 다른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언어적 다양성을 훼손해 왔다. 강력한 문화어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방언이 빠른 속도로 사멸되고 나면 결국 한국어의 언어적 자산도 함께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3.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정도와 원인

남한과 북한은 현재도 통역 없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방언적 차이가 크지 않다.²⁹⁾ 그런데 오히려 표준어와 문화어가 언어의 이질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준어와 문화어로 규정된 몇 단어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표준어에 대응하는 문화어³⁰⁾

표준어	문화어
계란말이	색쌈
근해	가까운바다
공염불	말공부
나이테	해돌이
가발	덧머리
마찰	쓸림

28) 1966년 김일성이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리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 쓰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면, 문화어를 남한의 표준어와 의도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어는 전적으로 평양말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다.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에 붙는 주격 조사 ‘-이’, 낮춤 의문형 등 평양 방언의 특징이 문화어에 채택되지 않았다.

29)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모든 민족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통역없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 두 정상만의 단독 회담 장면은 전세계에 언어적 동질성을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30)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남북한 언어 비교’에서 발췌.

표준어	문화어
미지수	모르는수
양껏	배껏
은유법	말바꿈법
야외수영장	물공원
팔찌	팔목걸이
폐수	버림물

이를 살펴 보면 일부는 남한 어휘를 근거로 추정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문화어만 봐서는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한 단어가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체계나 망(網)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단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은유(隱喩)’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보면, 이 단어는 단지 ‘언어적 표현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현상에도 전용(轉用)되는데, ‘은유적 현상’을 ‘말바꿈 현상’이라고 하면 의미 투명도가 더 낮아지고 만다. 이러한 상태로 30여년만 더 지난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³¹⁾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방언을 살려 나가는 정책보다는 국가 주도적으로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언어 정책을 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남북한 상호 접촉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휘 부분의 이질화는 특히 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어휘적인 면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질화의 정도가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인 표기법의 측면에서는 이질화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마춤법통일안’을 내 놓고, 분단 뒤 남한은 1988년 공식적으로 한글맞춤법³²⁾을 한차례 개정한 반면, 북한은 1948년 1월 조선어 신철자법 공포를 시작으로, 띄어쓰기 규정에 관한 개정을 포함하여 2010년 조선어규범집까지 총 7번이나 개정을 하였다.³³⁾ 북한 철자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1950년 발표한 조선어신철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 월북 국어학자인 김두봉이 주도한 ‘형태주의’, 즉 최대한 형태를 밝혀서 적는 원칙이 적용된 이래 2010년 조선어 규범집 이전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어 왔다. 2010년 개정된 조선어 규범집에서는 형태주의 원칙과 함께 발음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한의 한글맞춤법(1988)에서 형태주의와 발음주의를 혼용하여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³⁴⁾

31) 한용운 겨례말큰사전 편찬실장의 2018년 KBS ‘남북의 창’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남쪽 전문가가 한 10개 정도 어휘를 말하면 북쪽에서는 한 3.5개 정도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북쪽 사전을 참조할 수 없고 북쪽에서는 남쪽사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향후 이질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2) 1988년에 한글맞춤법으로 개정된 이후 2014년에는 문장부호법을, 2017년에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띄어쓰기, 예시의 수정 및 제거 등과 관련하여 부분 개정을 하였다.

33) 남한도 어느날 갑자기 한글맞춤법을 내 놓은 것은 아니고, 1970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안을 작성하고, 의견을 모은 뒤, 1987년 9월에 최종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으며, 국어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1988년에 한글맞춤법으로 고시한 것이다.

34) 예를 들어 남한에서 ‘달걀, 암돼지’이라고 적는 것을 북한에서는 ‘달알, 암돼지’로 밝혀 적는다.

두 규정의 체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5〉 한글맞춤법과 조선어규범집 목차

〈한글맞춤법(1988)의 목차〉	〈조선어규범집(2010)의 목차〉
• 제1장 총칙(제1항~제3항) • 제2장 자모(제4항)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제5항~제13항)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제14항~제40항) • 제5장 띄어쓰기(제41항~제50항) • 제6장 그 밖의 것(제51항~제57항) • [부록] 문장 부호	• 총칙 • 제1장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제1항) • 제2장 형태부의 적기(제2항~제7항) •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제8항~제13항) • 제4장 합친 말의 적기(제14항~제17항) • 제5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제18항) •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제19항~제24항) • 제7장 한자말의 적기(제25항~제27항)

이 두 규정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⁵⁾

〈표 6〉 한글맞춤법과 조선어규범집의 규정 유사 정도 비교

판정	항목 수	비율
동일	65	60.2%
유사	9	8.3%
일부 상이	11	10.2%
판이	5	4.6%
북한	18	16.6%
합계	108	100%

판정의 결과에서 ‘북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한의 규정에는 없고, 북한에만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비율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에만 있는 것³⁶⁾들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향후 이것까지 분석한다면 차이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약 79%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21%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 정도의 다른 규정도 아직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정치색이 별로 개입될 여지가 적은 표기법과 관련한 이질화 정도는 어휘적인 측면인 표준어/문화어의 이질 정도에 비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5) 임현열(2017)에서는 이 두 규정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정리하였다.

36) 남한에만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소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두음법칙이나 사잇소리 등에 관한 규정이다.

Ⅳ. 포스트휴머니즘 시대 표준어가 언중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

소통은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이는 상호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19세기까지도 한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가 존재했고, 하나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상호 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방언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표준어는 한 국가 내에서 언중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제까지의 노력 덕분에 방언 차이로 인한 불통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미래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은 언어 다양성 보장, 언어의 창조적 기능 활성화, 언어 평등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 언어 다양성 보장

언어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공통점은 소수 언어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어 정책을 주도해나가는 여부에 상관 없이 소수 언어나 지방 언어를 인정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³⁷⁾

이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선언은 특히 언어와 문화의 획일화를 반대한다. 선언문 5조를 보면,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 창조 전파를 지원’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벨 계획(Initiative Babel)이다. 바벨 계획은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언어 관련 정책 연구 사업의 수행, 문자 체계 개발 지원 사업, 인터넷상의 다언어주의 보고서 작성, 다양한 언어로 된 문화유산 지식 기반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언어 간의 관점이기기는 하지만 하나의 언어권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표준어를 강하게 성문화 했을 때, 방언이 위축을 받아 언어의 다양성이 줄어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2. 언어의 창조적 기능 활성화

강력한 표준어의 강조는 언어가 지닌 창조적 기능을 약화시킨다. 오늘날 통신 언어는 언어적 규범을 파괴하고, 언어의 변화를 가속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어휘를 사용하며, 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표준과 비표준을 구별할 수도 없게 된다는 연구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표준어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더군다나 통신 언어에서 표준어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언어의 창조성이 떨어져 영어식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³⁸⁾

37)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언어 표준화 정책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언어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3. 언어 평등권 확보

성문화된 표준어규정은 언어적 평등권을 저해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며, 태어난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며 성장한다. 그런데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해당 언어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교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불편부당하다. 프랑스혁명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표준어가 오히려 인간의 평등권을 보장해준다고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불평등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표준어가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언중은 이것을 통해서 언어적 평등을 획득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하나의 표준어를 통해 민족적·국가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증명된 바가 없다. 한 민족이나 국가에서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모국어에 대한 의식은 표준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는 방언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서 교정을 요구받는다면 오히려 일체감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4. 언어 변화 측면

언어는 ‘자연’과 ‘인공’ 두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잘 통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언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강한 어문규정으로는 급속도로 변하는 언어를 담아내기 어렵다. 더군다나 통일 이후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직된 규정으로는 요동치는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다. 표준어 규정이 그 때 그 때의 언어를 다 담아낼 수는 없고, 널리 정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규정으로 담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5. 한국어의 발전적 측면

한국어 발전의 관점에서도 표준화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 한국어의 풍부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어를 풍부한 언어³⁹⁾로 발전시키려면 지속적으로 한국어 어휘소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어휘소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고어와 방언에서 어휘소를 발굴해 내고, 신조어를 수용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개별언어는 인류의 중요한 소산이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지구의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듯이 한 언어권 내에서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만 한국 문화가 풍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強 언어규범의 국면에서는 다양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38) 통신언어 등장의 초기에는 이정복·김봉국·이은경·하귀녀(2000)과 같이 언어 파괴를 걱정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정복(2011.12)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 언어를 사회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국어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39) 풍부한 언어란 우리의 생각이나 외부 세계를 보다 정밀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6. 남북 교류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의 측면

남북 교류의 과정에서나 통일 후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독일의 경우처럼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을 이끌고 가기에는 무리인 상황에서 남한의 표준어를 강요한다면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러한 반발은 남북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해빙기에 새로운 언어 전쟁의 양상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 밖에 성문화된 표준어규정을 폐지하자고 했을 때, 예상되는 몇 가지 비판이 있다. 첫째, 지역간, 계층간 소통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는 것, 둘째, 공공 행정이나 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준이 없어져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셋째, 오늘날은 통신 언어와 같은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표준어가 없다면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어 사람들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를 각각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계층간 소통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주장은 특히 현대에 와서는 별 의미가 없다. 교통과 통신, 방송의 발달로 인하여 언어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미 지역간 계층간 장벽을 넘어 섰으며, 이로 인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거의 없다. 원래 지역 방언이 고착화되는 것은 고립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는 다양한 방언들을 서로 익혀 통합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표준어는 점점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표준어는 보수성, 폐쇄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적, 계층적으로 발생하는 언어를 수용하는 기간도 길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독일 등의 예를 보면 권위 있는 사전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 교육용 언어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표준어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명하게 표준어를 정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러한 방식은 언중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표준어 규정과 차이가 크다. 어떤 말이 표준적인지 아닌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국어의 경우, 표준어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자연스럽게 현재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나 표준한국대사전의 어휘⁴⁰⁾가 기존 표준어와 동등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오늘날 통신 언어는 언어적 규범을 파괴하고, 언어의 변화를 가속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어휘를 사용하며, 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표준과 비표준을 구별할 수도 없게 된다는 연구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표준어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더군다나 통신 언어에서 표준어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언어의 창조성이 떨어져 영어식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⁴¹⁾

40) 물론 단어 설명에서 '~의 사투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1) 통신언어 등장 초기에는 이정복·김봉국·이은경·하귀녀(2000)과 같이 언어 파괴를 걱정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V. 표준어 정책의 폐지와 남북한 언어 통합의 단계별 절차

표기나 발음 규칙은 어휘보다는 문제가 덜하다. 맞춤법 규칙은 단어나 표현보다는 더 보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언어 안에서 맞춤법으로 인해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덜한 편이다. 그래서 남북한 언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새로운 맞춤법을 정하기보다는 각각 정한 방식대로 표기하되, 다만 표준어와 문화어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민간 연구 단체에서 남북 학자들이 모여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가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규정을 지우고 나면 아직은 방언적 차이에 머물러 있어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일이다. 표준어 정책은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큰 동력이 된다. 하나의 언어가 두 개의 표준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장벽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이 정치적인 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처들이 뒤따라야 하지만 우선 언어적인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의 표준어로 통합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오히려 언어에서 표준어에 대한 개념을 지움으로써 자유롭게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표준화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표준어규정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방언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⁴²⁾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풍부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국어기본법 제12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 정하고 있어, 어문 규범이 ‘국민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 정신을 살릴 때가 되었다.⁴³⁾

다행히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⁴⁴⁾의 방향이 희망을 주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사업) 3항’을 보면 편찬사업회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채집·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의 방향도 남과 북의 대표적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50만 9000여 어휘 수록)과 ‘조선말대사전’(33만여 어휘)에서 공통적인 것과 다른 것 20만개를 뽑고, 이들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지역 방언 10만개를 새로 조사 발굴하여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표준어 중심으로만 사전의 편찬을 하지 않고, 지역 방언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준어라는 용어와 정부 차원의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을 폐지하고 나면 이를 대체할 용어로 ‘공동어’를 제안

이정복(2011.12)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 언어를 사회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국어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42) 조선어학회에서 표준어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홍기문은 이를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홍기문, 표준어 제정에 대하여(조선일보 1935년 1월 15일)). 어떤 지역과 계급을 대표하는 말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은 방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3)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익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4)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건의한 내용이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실현되어 남북한이 합동으로 사전을 편찬하기로 함에 따라 남한에서는 2006년 1월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하고자 한다.⁴⁵⁾ ‘공동어’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축소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이보다는 확산지향적으로 ‘공동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북한 뿐만 아니라 해외 한민족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대립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중국에는 통일에 이를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언어를 선별하는 표준어는 폐지하고, 해외 동포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한국어 총체를 제시하는 개념이다. 이는 표준어가 한국 공통어이고, 방언은 지역 공통어라는 개념을 분리적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방언을 언어 사용 대상으로 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나 국가 행정 용어 등에서 가급적 많은 방언들을 사용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가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거대 비중 언어에 밀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 인구의 수도 중요하지만 언어적으로도 풍부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휘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 1) 방언의 사용
- 2) 고어의 재활용
- 3) 신어의 개발

이 중 신어의 개발이나 고어의 재활용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방언의 사용은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강력한 표준어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방언의 대부분은 문헌에만 남게 되고, 이를 되살려 쓰려면 역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표준어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이라도 표준어 정책의 수위를 낮추고 방언을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모두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언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단계적 이행 절차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국어 표준화 이완 단계

단계	언어 표준화의 국가 개입 배제 단계 ⁴⁶⁾	이행 사항	관련 내용
1단계	강(強)표준화 단계 - 기존의 표준화가 존재하는 단계	한민족공동어(韓民族共同語) 구축위원회 설립	남북한, 해외 동포 학자 참여, 현행 한국어 표준화 문제점 토의
2단계	약(弱)표준화 단계 - 표준화의 주체가 국가로부터 민간으로 변경되는 과도기	한민족공동어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정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언을 선정하고 보급
			한민족공동어 사전 개발
			한민족공동어 교육 과정 개발

45) 현재까지 표준어를 대체할 용어로는 공통어, 규범어 등이 제안된 바 있다.

46) 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해 주었다. “통일 후의 언어정책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면, 전 세

단계	언어 표준화의 국가 개입 배제 단계 ⁴⁶⁾	이행 사항	관련 내용
3단계	무(無)표준화 단계 - 인위성이 배제되고 다수의 권위있는 민간 단체가 사전 등의 형태로 한국어 목록을 제시	남한과 북한이 각각 표준어와 문화어 규정 폐지하고 한민족 공동어 수립	국가적 수준의 표준어 정책 폐지

‘한민족공동어 구축 위원회’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 개편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남북한이 다시 정치적으로 경색 국면을 맞이하여 교류가 어려워진다면 남한에 서라도 표준어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단계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한민족 언어 공동체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어떤 국가든 언어 소통을 위한 표준적인 언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이 표준어를 규정하는 주체와 구속성 정도가 문제다. 규범을 정하는 주체가 민간 연구소나 학회가 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규범의 구속성 정도도 낮아질 수 있다.

100년 전 과거만 해도 표준어를 정할 때, 지역적 고립성이 강하여 언어적 접촉이 희소했으므로 특정 지역어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강했지만 미래로 갈수록 교통과 방송, 통신의 발달로 지역적 개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한 지역의 언어를 표준으로 삼아 어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공동어에서 지역성에 관한 조항은 ‘한반도에서 통용 가능한’으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표준어 기준 중 하나인 계층성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표준어 선정에서 ‘계층성’은 중요한 개념이었다. 계층마다 사용하는 말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 통신의 발달은 언어적 고립성을 낮추었으며, 더구나 사회적으로 볼 때 표준어 개념이 도입되던 근대 시기에 비해 계층적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다. 근대 시기에는 계층 간의 접촉이 활발하지 않았던 반면에 현대에 와서는 계층 간의 접촉도 활발할 뿐 만 아니라 근대에 비해 계층 간의 이동도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도 보면 계층에 따라 언어적 특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동안 계층성을 개념으로 활용한 ‘중류층(중산층)’은 너무나도 광범위해졌으며, 표준어 규정(1988)에서 준용한 ‘교양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계층의 범주가 모호하다.

다만 어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의 방향성은 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언어 순화에 관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 순화를 지속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남북한이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언어 순화를 진행해 가고 있다. 언어 순화는 한국어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한국어 내에서 소통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통일 후에는 세계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계의 표준어 관리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간적인 형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지금처럼 인위적인 기준과 항목 선별을 통해서 목록을 강하게 관리하고 국민에게 강제하거나 강하게 권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국가가 맡는 것이 그 방법론의 취지하고도 어울릴 듯합니다. 후자는 언어 실재를 조사, 분석하여 사전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제시하되,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 관념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을 제시 목록에서 부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필자는 국가가 언어의 표준화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지지하며, 단계적으로 무표준화로 이행해 가야한다고 본다.

바, 어느 정도까지 순화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자어의 고유어화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순화의 방식이 기존에 있는 고유어 어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⁴⁷⁾

두 번째로 북한에서 인위적·강제적으로 순화한 표현, 정치적 용어 등은 미리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제 유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어휘나 표현들은 통합을 위해서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겨레말큰사전 어휘 구축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논의를 시작하려면 기반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미리 통합 사전을 준비해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막상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이러한 작업을 시작한다면 시기를 통합 논의의 장을 준비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Ⅵ. 결 론

왕권의 강화라는 목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표준어 정책은 현대에 와서는 ‘공공 언어 사용의 기준’이라는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언어는 ‘자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용자의 수나 언어 지리적 중심성에 불구하고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더군다나 한 언어권 내에서 표준과 비표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형성된 시기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며, 성문화된 표준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선진국의 사례, 남북한 교류와 통일을 위한 대비, 언어 다양성 보장이라는 현대 소통의 개념 등을 근거로 국가적인 차원의 표준어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표기법 규정에 있다기보다는 표준어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만나 서로 통역 없이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아직 우리가 하나의 언어권 안에서 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가 ‘지역성, 계층성, 시대성’을 근간으로 하는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강한 국가적 차원의 규정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질화가 계속될 것임은 자명하며, 남북 교류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근거로 성문화된 표준어규정을 폐지하고자 주장한다.

- 1) 표준어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이유로 형성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중앙정부와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확립된 이 개념이 일본을 거쳐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형성된 표준어는 남북 대립기에 각각 표준어와 문화어로 정착되었으며, 이것이 성문

47) 한국어의 조어 방식이 대부분 단어 간의 의미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고유어 어소를 이용하는 방식만으로 어휘를 확장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화된 규정으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문화된 표준어도 폐기되어야 한다.

-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문화된 표준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3) 남과 북의 언어 이질화는 맞춤법보다는 어휘적인 면에서 심화되고 있는데,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개념이 이질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4) 근대국가 시기 때까지는 표준어가 소통에 편리를 제공해 주었지만 이미 방언적 차이가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은 현대에 와서는 언어 다양성 확보, 언어의 창조적 사용, 언어 평등권 확보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성문화된 표준어는 오히려 소통의 풍부함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성문화된 표준어를 폐지했을 때의 대안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5) 남북한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모두 포괄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표준어 대신에 ‘공동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제안한다. 이 때, 공동어는 한민족이 사용해 온 언어라는 역사성의 바탕 위에서 정립되어야 하며, 가능한 많은 방언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 6)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단어 등이 한국어 사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 향후에 남북한이 활발히 교류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금함보다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표준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 약표준어 단계로 이행 ⇒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표준어와 문화어 규정 폐지를 통한 무표준어 단계로 집입

인위적으로 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우세한 언어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현대에는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고, 방송이나 통신 등을 통해 다른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성문화된 표준어규정을 정해서 우리 언어의 보고(寶庫)인 방언을 위축시킬 명분이 약해졌다. 향후 남북한이 활발히 교류하고, 중국에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언중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중 더 우세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교육과 언론에서 사용한다면 표준어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 가질 수 있다. 현대는 하나의 강력한 규율이 지배하는 시대이기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표준어 규정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국어학회 편, 세계의 언어 정책, 태학사, 1993.
- 권인한, 남북 맞춤법의 비교와 검토, 국어문화학교 1, 국립국어연구원, 1992.
- 김병문 · 주영훈,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2017.
- 김병욱, 프랑코포니의 언어관 탐색 : ‘문화적 예외’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언어, 『한국프랑스학논집』 64, 한국프랑스학회, 2008.
- 김선철, 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17: 2, 사회언어학회, 2009.
- 김세중,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 1, 국립국어원, 2004.
- 김주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성격과 특성, 『반교어문연구』 37, 반교어문학회, 2014.
- 김철준, 새로 편찬된 《조선말규범집》의 일부 내용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09, 길림, 성민족사위원회, 2017.
- 김하수, 연구동, 남과 북의 맞춤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김현권, 프랑스의 모국어 보호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원, 2003.
- 문금현,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2004.
- 민현식, 표준어와 언어정책론(1), 『선정어문』 27, 선정어문학회, 1999.
- 민현식,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에 대한 토론편, 『새국어생활』 14: 1, 국립국어원, 2004.
- 국립국어원 편, 특집 표준어 정책과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 『새국어생활 106』 14: 1, 2004년 봄.
- 양민호, 일본 방언 사전의 경위와 의의, 『새국어생활』 27: 1, 국립국어원, 2017.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2005.
- 유목상, 북한의 맞춤법,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89.
- 이상규 · 조태린 외,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표준어 넘어 서기, 태학사, 2008.
- 이은정, 남북한의 맞춤법 비교 검토, 『한글』 205, 한글학회, 1989.
- 이웅백, 달라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국어교육』 65, 국어교육학회, 1989.
- 이정복 · 김봉국 · 이은경 · 하귀녀, 바람직한 통신 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2000.
-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2011.
- 임영철, 일본의 국어 정책과 일본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 임현열, 남북 맞춤법의 조항별 대조 - 북한의 규정에 남한의 규정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13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2017.
- 정달영, 한국어와 조선어의 맞춤법 비교 및 통일 방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15, 한민족문화학회, 2004.
- 정훈탁, 남북한 맞춤법 비교와 통일 방안, 『인문학연구』 3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4.

- 정희원 · 위진,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새국어생활』 21: 4, 국립국어원, 2011.
- 조오현 · 김용경 · 박동근, 남북한 언어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2002.
- 조태린, [연속기획 / 서울 vs 지방 - 표준어와 사투리]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생각의 나무, 2004.
- 조태린, 성문화된 규정 중심의 표준어 정책 비판에 대한 오해와 재론, 『國語學』 79, 국어학회, 2016.
- 최경은, 통일 이후 동서독 독일어의 통합 과정, 『독일 언어문학』 21, 한국독일언어문화회, 2003.
- 차봉희, 한국의 독일 문학 수용 100년,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최경봉,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2006.
- 최경봉,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사용과 개념, 『새국어생활』 21: 4, 국립국어원, 2011.
- 최경봉 · 시정곤 · 박영준, 한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책과 함께, 2008.
- 최호철, 북한의 맞춤법, 『국어생활』 15, 국어연구소, 1988.
- 최호철, 북한 '조선말 규범집'의 2010년 개정과 그 의미,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화회, 2012.
- 한용운,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07.
- 한재영, 외국의 표준화 정책, 『새국어생활』 21: 4, 국립국어원, 2011.

※ 이 논문은 2018년 5월 25일에 투고되어,
 2018년 6월 15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7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7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Necessity of Transition of the
Standard Language Polic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Standard Language on Communication in the Posthumanism Era -

Lee, Chankyu*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actors that accelerate language heterogeneity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codified standard language polic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codified standard language because it can make communication difficult.

Historically, the notion of standard language began in England in the 15th century, and France was influenced in England, which again influenced Germany. During the period from the 15th to the 19th century, the standard language policy, which was intended to strengthen the kingship in Europe and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fluenced imperial Japan through Germany and this led to Kore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day, It became a nation that enacted a strong standard language policy.

Comparing the languages of the two Korea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spell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erms of lexicon. It seems to be the result that North Korea has strongly promoted the use of cultivated standard language, and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strong standard language policy. The fact that the two Koreas have the standard language of each codified standard language can be a source of conflict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Communication is the most basic function of language. Historically, the standardization of language has helped communication until 19th century.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ensuring language diversity, activating creative function of language and securing the right of language equality' has been strengthened in modern times, as a result, standard language is rather a factor preventing communication abundance. For that reason I suggest abolishing the codified standard language.

If we abolish the codified standard language, we will use the most, the standard in

*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broadcasting and media, and the way to educate students based on the languages included in the dictionary, and many other benefits, is a reasonable way. In this paper, instead of the concept of 'alternative' as the standard language, this paper proposes the concept of 'Unified Common Korean', which is a common language used by all Koreans.

[Key Words] standard language, culture language of North Korea,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Standard Language Policy, Unified Common Language, Language heterogeneity, Language Unification